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도 분석에 관한 연구 -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

김명호
통일문제연구원

<요약문>

2018년에 일어난 3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더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가 최대의 관심사이며,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변화가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 사업에 대하여 (사)통일문제연구원이 지난 9월에 실시한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강원도 소재 대학생들과 주민들의 설문결과를 이용하여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정리해 보면, 응답자들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공동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지만, 많은 응답자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미평화협정 및 남북기본협정의 체결에 뒤따르는 후속과제는 군비통제이다. 그러므로 북한과 협력하고, 통일을 위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과제이므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대비도 결코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남북정상회담, 통일관련 인식도, 판문점선언, 남북교류협력사업

I. 서 론

2018년에 접어들면서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4월 27일과 5월 16일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6월 12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그리고 9월 20일~21일에 평양정상회담이 있었다. 이렇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큰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까지 그동안 남북관계에서 이루어졌던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통일부(1992)는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1992년 2월 19일 제6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발효된 배경이 노태우 정부의 제6공화국이 통일 번영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해 온 북방정책의 성공적인 결실이라고 설명하였다(이석범, 2016, p.10).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으로 작성된 기본합의서는 일시적으로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였으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남북관계는 단절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동안의 합의들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다(이석범, 2016).

그러다가 2009년 중반에 들면서 북한의 태도는 유화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을 8월 평양으로 초청하여 금강산과 개성관광 재개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그동안 중단됐던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추석 전에 허용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 포기 에 대한 의사 표명이 없는 한, 만남을 위한 만남은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더구나 북한의 요구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싱가포르 비밀접촉(2009년 10월)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종철, 2009).

한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집권 이후, 2013년 3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6년과 2017년 사이 4차, 5차, 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44여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단행하였다(김동민, 2018, p.2).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과의 관계가 급변하고 있다. 2017년 6월 15일, 문 대통령은 6·15 공동선언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2017년 7월 4일 대륙간 탄도로켓인 화성-14형 시험발사로 본격적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였고,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에서 갑자기 유화적인 태도로 평창동계올림픽 참석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남북대화에 응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통일부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북한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에서 남과 북의 선수들이 공동으로 입장하였다.

현 정부(2018)는 남북분단이래 단 2회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을 2018년에만 3차례 개최하였으며, 이것은 남북관계가 복원과 정상화를 넘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도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이데일리, 2018/7/31)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3.5%가 장기적(79.6%) 혹은 이른 시일 내(3.9%)에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통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도 64.6%를 기록하여 국민 상당수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KBS(2018/8/15)가 ‘2018 국민 통일의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들어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20.6%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호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하여 북한의 인권 탄압문제를 내세워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었다.

이은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평화통일을 바라고 원하지만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참혹한 북한 인권문제를 덮어두고 갈 수는 없다”며,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평화만 주장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더 챙겨야 한다”고 했다(조선일보, 2018/7/9, p.A4).

그리고 문대통령의 방북 전날인 9월 17일, ‘목발 탈북자’ 지성호씨는 북한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국회의사당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여,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평화는 중요하다. 북한 주민의 인권은 평화의 장애물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뉴시스, 2018/9/18).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11월 17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문 대통령이 최근 아세안(ASEAN) 정상회의 등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에 대해 “솔직히 문 대통령의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북한에 굴 200톤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도 “한국이 미국 등 동맹과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조선일보, 2018/11/20, p.A6).

이와 같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주변국과의 관계와 인권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원도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데 있다.

II. 남북관계의 시대적 흐름

1. 기존의 연구

1) 남북정상회담 관련 연구

그동안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 2018년 4월, 5월, 9월 문재인-김정은 사이 등 모두 5차례가 열렸다. 이외에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시도는 매 정부마다 있어 왔으나 실패하고 말았다(정국진, 2018, p.8).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3차례 합의가 있었는데, 김영삼-김일성 정상회담은 김일성의 사망으로 열리지 못했다. 다음 표는 그동안의 남북정상회담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도희윤, 2018, pp.19-20).

<표 1> 남북정상회담 발자취

항 목	시 기	합의문	장 소
김영삼-김일성 : 불발	1994년 7월 25일		평양 예정
김대중-김정일	2000년 6월 13~15일	6·15 공동선언	평양
노무현-김정일	2007년 10월 2~4일	10·4 선언	평양, 백화원초대소
문재인-김정은 : 1차	2018년 4월 27일	4·27 판문점선언	판문점 '평화의 집'
문재인-김정은 : 2차	2018년 5월 16일		판문점 '통일각'
문재인-김정은 : 3차	2018년 9월 18~20일	평양 공동선언	평양

* 출처 : 도희윤. (2018). “남북자 송환과 정상회담.” 평양남북정상회담 남북자 송환촉구를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 『2018 긴급 정책토론회』, 19-20.의 내용을 보완함.

권기웅(2012)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는 14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는 한반도 분단 65년 중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각 정부의 정권별 대북정책 내용과 성과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석범(2016, p.10)에 의하면, 남북기본합의서는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하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근분규범으로 보았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국내법적 방안과 국제법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통일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력체제 구축이라는 국제문제의 이중적 성격을 가지므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정책을 펴도록 적극 설득하여야 한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북핵문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일본까지 포함하는 동북아 비핵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석범의 주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대내외적으로 설명하고 실행해 나가는 방향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미국을 포함한 유럽 등 우리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에서조차도 이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김무성 의원은 “문 대통령이 아셈(ASEM :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를 풀어 달라면서 다녔는데, 유럽의 어느 강국 정상이 미국 쪽에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우리는 자기 나라를 위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 중인데, 정작 당사자는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하니 이상하다’고 말했다”고 했다(조선일보, 2018/11/20).

고성화(2017)는 지방정부의 강점인 유연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안정적인 남북한의 관계를 위해 지속가능한 교류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반도 DMZ 내 선전마을 2곳의 자매결연을 통한 남북한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실현가능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정국진(2018)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리더십 변수는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국제 변수, 북한 변수, 국내 변수를 고려하며, 이 변수들의 경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남북정상회담의 시기 등을 조절하는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가르지는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현 시점에서 가장 주목할 일은 2018년 4월 27일, 한국과 북한의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다음 사항에 합의한 것이다. 즉, 두 정상은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와 종전선언을 합의하였으며, 희망적인 분위기로 회담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판문점선언은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과거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은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해 그저 정치적인 약속에 그치고 말았

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음 <표 2>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회담의 합의 사항과 그동안의 이행 현황들을 정리한 것이다. 지금 정부는 북한과의 합의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2> 판문점선언 합의사항별 이행 현황

	사항	현황
I. 관계 개선	①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회담 개최	• 개최(6.1/8.13) •분야별 회담 개최 : △체육(6.18) △적십자(6.22) △철도(6.26) △도로(6.28) △산림(7.4) △군사당국자(6.14/6.25/7.31/9.13-14)
	② 개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9.14, 개성)
	③ 교류협력 활성화 - 체육 교류	•국제대회 공동진출 : △아시아게임 공동입장 및 단일팀 출전(8.18-9.2, 인도 네시아) △장애인아시아게임 남북단일팀 합동훈련(9.3-6, 베이징) •국제대회 상호참가 : △코리아오픈 국제탁구대회(7.17-22, 대전) △세계사격선수권대회(8.31-9.12, 창원) •종목별 교류 : △통일농구경기(7.3-6, 평양) △유소년축구대회(8.13-18, 평양)
	- 문화·예술·역사 등 교류	•일제 강제징용 희생자 유해 봉환 : △남북 민화협간 협의(7.16-19) △남·북·일 공동기구 출범(8.6) •개성 만월대 관련 실무협의(9.6), 발굴 재개 합의
	④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적십자회담(6.22) •이산가족 면회소 등 시설 개보수(7.9-8.14) •이산가족 상봉행사(8.20-26, 금강산)
	⑤ 10.4선언 이행 -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철도 남북연결구간 공동점검 : △동해선(7.20) △경의선(7.24) •도로 현지조사 : △경의선(8.13-20, 개성-평양)
	- 산림 협력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7.4) •산림병해충 공동점검(8.8, 금강산)
	- 한반도 신경제구상	•한반도 신경제구상(안)을 북측에 전달(4.27 남북정상회담)
II. 군사적 긴장 완화	① 적대행위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 방송·전단 살포 중단 및 수단 철거(5.1-4)
	②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이행 의지 상호 확인 및 입장 교환
	③ 서해 평화수역 조성	•서해 해상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정상화(7.1)
	④ 교류협력 군사적 보장	•군통신선 완전 복구 : 서해지구(7.16), 동해지구(8.15)
	⑤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장성급 군사회담(6.14/7.31) △군사실무회담(9.13-14) △통신실무접촉(6.25)
III. 향구적 평화 체제	① 단계적 군축	•신통구축을 통한 초보적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 추진방안 검토·협의
	② 종전선언/평화협정 전환	•△북미정상회담(6.12) △북미고위급접촉(5.9, 5.31, 7.6-7) △역류 미국인 3명 송 환(5.9) △한미연합훈련 유예(6.19) △미군 유해 55구 송환(7.27) 등
	③ 한반도의 안전한 비핵화	•△풍계리 핵시험장 폐기(5.24)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해체 등
IV.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5.26, 판문점 통일각), •2018 남북정상회담(평양) 개최(9.18-20)

* 출처 : 대한민국 정부. (2018). 『2018 남북정상회담(평양) 참고자료』, p.4.

2) 국민들의 통일문제 인식도 관련 연구

최근, 남북관계가 정부 정책에 맞추어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8)은 국민들의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하였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2017년 41.9%에서 2018년 54.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핵무기를 위협으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78.4%로 전년대비 4.2%p 낮아졌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82.3%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북한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며, 대폭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KBS(2018)가 광복절을 맞아 국민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 올해 들어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지난해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핵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더 높아졌지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신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살펴보면,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가 20.4%,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가 45.6% 였는데, 긍정적 답변이 66.0%로 지난해 72.7%보다 오히려 줄었다. 다만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의견이 84.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체의 3분의 2 가량인 65.7%는 20년 안에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하였다.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체부)(2018)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북한을 협력 대상이자 위협의 대상으로 생각하였으며, 대북 정책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이고,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75.1%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에 대해서는 '남북 간 협력'(70.9%)이라는 응답이 한미 간 협력(17.6%), 북미 간 협력(8.8%)보다 월등히 높았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63.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38.0%) '남북 간 경제협력'(31.6%) '북한의 개혁·개방'(27.0%)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2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안보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평소 안보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88.0%로 나타났다. 현재 안보상황을 '안정적'이라고 보는 의견은 52.9%로 '불안정하다'(47.1%)는 의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 정부, 2018, pp.65-66).

2. 북한 관련 대내외적 자료 분석

1) 대북사업 현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급격히 활성화 되었다(특히, 2007-2008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으로 정체기를 맞게 되었고, 2008년 7월 이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은 중단된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남북교류가 조금씩 활발해지자, 통일부는 2003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 지침'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4년 9월 1일,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 주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규범적 정책 지향을 설정한 법률적·제도적 근거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 정부, 2018, pp.65-66). 그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

다.

<표 3> 2009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의 주요 남북교류협력사업

년도	지자체	추진 사업
2009	서울	대북 옥수수 및 조선종양연구소 지원
	대구	북한 어린이 내복 보내기
	경기	개풍양묘장 조성, 말라리아 공동방역, 대북긴급 식량지원, 양돈 현대화 사업 등
	인천	남북 유소년 축구팀 합동전지훈련 지원 등
	광주	배합사료공장 지원
	강원	안변송어양식장 건립, 산림병해충 방제 등
	충북	북 고성군 과수원 조성 지원
	제천	과수원 조성, 통일딸기 모주 재배, 의약품 지원 등
	경남	개성지역 사과 과수원 조성
2010	제주	북한 감귤 보내기, 흑돼지 사육 협력
	서울	수해지역 구호물품 지원
	대구	북한 어린이 내복 보내기
	인천	북한 영유아 지원, 수해지역 구호물품 지원
	광주	배합사료공장 지원
	경기	개풍 양묘장 조성, 말라리아 공동 방역, 양돈 현대화 사업
	경남	과수원 조성, 통일딸기 모주 재배 등
	제주	북한 감귤 보내기
	경남	거창 과수 농약 지원
2011	경기	말라리아 공동 방역
	인천	말라리아 공동 방역, 중고 자전거 지원
2012	대구	어린이 내복 보내기
	인천	식량, 생필품, 의약품 지원, 말라리아 공동 방역, 식량 생필품 구호 지원, 유실수 조림, 치어 방류, 수산양식 기술이전 및 교류, 경운기 지원, 체육 물품 전달
	경기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 전염병 지원, 개성 지역 한옥 보전 사업
	강원	산림병해충 방제, 연어 부화장, 양어 사료 공장 운영, 송어 양식장 건립, 말라리아 공동 방역
	경남	통일 벼종자 보내기, 통일딸기 모정 지원, 시설온실 개보수, 콩 농사자재지원, 영양식, 교과서 용지 60톤 지원, 종자 묘목, 병해충 방제 지원
2013	서울	경평 축구대회, 서울 시향 교환 공연 지원, 못자리용 비닐막 지원, 산림조성 및 병충해 방지 협력, 의료장비 및 소모품 지원, 북한 영유아 식량 및 학용품 지원, 재난구호지원 등
	경기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개성지역 한옥 보존 사업
2014	경기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 개성지역 한옥 보존 사업, 유소년 축구대회
2015	경기	유소년 축구대회, 양궁 교류전 개최

* 출처 : 전영욱·김연근. (2018).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다차원적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1권, 제2호, p.388, 대한민국 정부. (2018). 『2018 남북정상회담(평양) 참고자료』. pp.65-66.에서 재인용.

2) 주변국과의 관계

(1) 북중관계

북한과 중국이 그간 소원해졌던 양국관계를 뒤로 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3월 25일~28일 사이 베이징 조어대에서 1차 정상회담을 진행하였고, 이어 약 40여일만인 5월 7일~8일 사이에 라오닝성 다롄에서 2차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6월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시진핑-김정은의 3차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국제 지역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관계를 발전시키고 공고히 하려는 중국의 확

고한 입장과 북한 인민에 대한 우호와 사회주의 북한을 향한 지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양국관계 복원의 의지를 표명하였다(김동민, 2018, p.1).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자를 중심으로 종전선언과 협력강화를 위한 모색을 하려는 시도에 대해 중국 정부는 심한 반발과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향후의 한반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가시화되고 진전을 이루게 되면, 미군철수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자적 틀의 구도 속에 새로운 안보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 역시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이면합의가 있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변화하는 북중관계의 양상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향후 우리 정부는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동민, 2018, p.41).

(2) 북일관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의지를 잇따라서 내비치고 있다.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계기로 가망이 없어보였던 북일 간 국교정상화에 힘을 실는 모양새다. 그러나 인권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으면서 이른 시일 내 북일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월 24일 개최한 임시국회 연설에서 “나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북일정상회담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상호불신의 껍데기를 깨고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 아베 총리는 10월 12일 강연회에서 “북한과 상호불신을 깨고 김 위원장과 직접 마주 보고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데일리안, 2018/10/26).

일본은 2002년 9월,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며, 고이즈미 총리와 평양선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고이즈미 수상 때부터 거국적 차원에서 다루었으며, 당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핵무기를 둘러싼 대립에 대하여 日高義樹(2017, p.2)는 핵전쟁 위험을 훨씬 능가하는 큰 위협으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와 세계인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미사일들을 갖고, 게다가 미국이 북한을 제압할 수 없다면 미국의 세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새로운 국제질서가 나오게 되며,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제 전략상의 파탄’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日高義樹(2017, p.4)는 동맹국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후퇴하는 것은 그대로 일본이 중대한 위협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의 존재와 국가적 이익을 지키려면, 스스로 힘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더라도 미국이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일본은 독자적인 핵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북러관계

푸틴 대통령은 2018년 5월 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최근,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의 중간선거 이

후로 미뤄지면서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에너지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 확대는 물론이고, 러시아 카드를 사용하여 미국의 비핵화 압박을 견제하고 상응하는 대가를 얻으려는 목적 때문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푸틴의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많이 다르다. 트럼프가 북핵문제에서 급적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고 일괄타결을 추진하는 것에 반해, 푸틴 정부는 단계적, 동시적, 다자적 접근을 선호한다(윤성학, 2018, p.48). 그러므로 러시아 행정부는 북한의 점진적인 군축 조치에 따라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도 동시에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북한의 인권문제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10월 1일(현지 시각)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할 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인권 활동까지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인권단체들도 현 정부 집권 이후 북한의 인권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라고 하였다(조선일보, 2018/10/3).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은경 위원은 중국에서 탈북한 식당 종업원 문제에 대해 “탈북 식당 종업원들이 노출되는 것 자체를 원치 않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직접 만나지 못했다”고 하며,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들을 인터뷰하고 거주지를 공개한 것은 본인과 북한의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다”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은 지난 14일 서울의 한 토론회에서 “남북 관계에서 인권문제를 전제 조건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은경 위원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그는 “북한이 우리와 다른 체제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인권 침해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였다(조선일보, 2018/7/9, p.A4).

미국의 인권단체인 ‘인권재단’(HRF)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보다는 독재자 김정은과 관계 개선하는 일을 더 중시하는 입장을 몇 차례 만남을 통해 비쳤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사안을 외면할 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인권 활동까지 억압하는 것은 비극적이고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조선일보, 2018/10/3, p.A5).

또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반대하며 잇달아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까지 매주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조선일보, 2018/11/6, p.A12).

Ⅲ. 통일관련 인식도에 대한 실증분석

1. 연구방법 및 기초자료 분석

1) 연구방법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통일문제연구원이 지난 9월에 실시한 강원도 소재 대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설문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문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① 응답자의 인적사항, ② 통일 정책 문제, ③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등으로 제시되었으며, SPSS V.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설문에 답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대해서는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의 나이와 ① 통일의 필요성, ② 김정은 위원장의 호감도, ③ 최우선 대북정책 간의 교차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생각’, ‘통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 ‘통일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대상’ 등의 설문내용은 3개의 답변이 가능하도록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실증적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기초자료 분석

(사)통일문제연구원이 접경지역인 강원도에 거주하는 대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조사는 2018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회수된 745부의 설문지 가운데 응답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답이 없거나 설문항목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답한 34부를 제외하고, 711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남자’ 376명(53.9%), ‘여자’ 335명(47.1%)으로 나타났으며, 나이는 ① ‘20세 이하’ 175명(24.6%), ② ‘21-30세’ 384명(54%), ③ ‘31-40세’ 49명(6.9%), ④ ‘41-50세’ 42명(5.9%), ⑤ ‘51-60세’ 46명(6.5%), ⑥ ‘61세 이상’ 15명(2.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직업별로 살펴보면, ① ‘대학 1학년’ 215명(30.2%), ② ‘대학 2학년’ 133명(18.7%), ③ ‘대학 3학년’ 131명(18.4%), ④ ‘대학 4학년’ 70명(9.8%), ⑤ ‘일반인’ 162명(22.8%)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들의 응답 비중이 77.2%로 매우 높았다.

<표 4> 응답자의 인적 특성

항 목	세부 항목	인원수	비 율
성 별	남자	376명	53.9%
	여자	335명	47.1%
나 이	20세 이하	175명	24.6%
	21-30세	384명	54.0%
	31-40세	49명	6.9%
	41-50세	42명	5.9%
	61세 이상	15명	2.1%
직 업	대학 1학년	215명	30.2%
	대학 2학년	133명	18.7%
	대학 3학년	131명	18.4%
	대학 4학년	70명	9.8%
	일반인	162명	22.8%

* 출처 : (사)통일문제연구원에서 2018년 9월에 실시한 ‘강원도 주민 인식도 조사’의 자료를 이용함.

(2) 북한에 대한 생각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차적으로는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가 333명(46.8%)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남북관계에 대해 아직도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북한은 ‘통일의 대상이다’가 360명(50.6%)으로, 이것은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남북한의 통일’을 생각하고 있

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응답자들의 북한에 대한 3차적 생각으로 ‘도움의 대상이다’ 195명(27.4%)으로 나타났으며, 2차적인 것과 근소한 차이로 ‘경계의 대상이다’ 174명(24.6%) 이었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북한에 대한 1차적 생각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333	46.8	47.2	47.2
협력의 대상이다	299	42.1	42.4	89.6
통일의 대상이다	48	6.8	6.8	96.5
경계의 대상이다	9	1.3	1.3	97.7
도움의 대상이다	8	1.1	1.1	98.9
선의를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5	.7	.7	99.6
우리의 적이다	3	.4	.4	100.0
결측값	6	.8	100.0	
Total	711	100.0		

(3)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에 대하여 ① ‘아주 좋다’ 9명(1.3%), ② ‘조금 좋다’ 25명(3.5%), ③ ‘보통이다’ 257명(36.1%), ④ ‘조금 안좋다’ 186명(26.2%), ⑤ ‘아주 안좋다’ 227명(31.9%)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58.1%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아주 좋다	9	1.3	1.3	1.3
조금 좋다	25	3.5	3.6	4.8
보통이다	257	36.1	36.5	41.3
조금 안좋다	186	26.2	26.4	67.8
아주 안좋다	227	31.9	32.2	100.0
결측값	7	1.0	100.0	
Total	711	100.0		

(4)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하여 ① ‘100% 포기할 것이다’ 44명(6.2%), ② ‘50% 정도 가능하다’ 244명(34.3%), ③ ‘포기하는 척만 할 것이다’ 285명(40.1%), ④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52명(7.3%), ⑤ ‘모르겠다’ 76명(10.7%)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41.1%)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47.4%)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응답자들이 북한 정권을 믿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표 7>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100% 포기할 것이다	44	6.2	6.3	6.3
50% 정도 가능하다	244	34.3	34.8	41.1
포기하는 척만 할 것이다	285	40.1	40.7	81.7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52	7.3	7.4	89.2
모르겠다	76	10.7	10.8	100.0
결측값	10	1.4		
Total	711	100.0		

(5)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①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150명(21.1%), ② ‘조금 필요하다’ 231명(32.5%), ③ ‘보통이다’ 180명(25.3%), ④ ‘아직 시기상조다’ 129명(18.1%), 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19명(2.7%)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53.7%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통일의 필요성

	Frequency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150	21.2	21.2
조금 필요하다	231	32.6	53.7
보통이다	180	25.4	79.1
아직 시기상조다	129	18.2	97.3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19	2.7	100.0
결측값	2	100.0	
Total	711		

(6) 통일에 대한 이익 정도

“통일이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① ‘이익이 매우 클 것이다’ 198명(27.8%), ② ‘이익이 조금 있을 것이다’ 307명(43.2%), ③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다’ 82명(11.5%), ④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124명(17.4%)으로 나타났다. 즉, 질문에 답한 응답자들의 71%가 통일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통일에 대한 이익 정도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이익이 매우 클 것이다	198	27.8	27.8
이익이 조금 있을 것이다	307	43.2	71.0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다	82	11.5	82.6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124	17.4	100.0
Total	711	100.0	

(7)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① ‘100% 가능하다’ 75명(10.5%), ② ‘50% 정도 가

능하다' 359명(50.5%), ③ '20~30% 정도 가능하다' 226명(31.8%), ④ '불가능하다' 31명(4.4%), ⑤ '모르겠다' 20명(2.8%)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92.8%가 통일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100% 가능하다	75	10.5	10.5
50% 정도 가능하다	359	50.5	61.0
20~30% 정도 가능하다	226	31.8	92.8
불가능하다	31	4.4	97.2
모르겠다	20	2.8	100.0
Total	711	100.0	

(8) 남북통일의 실현 전망

남북통일의 실현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① '아주 빠를 것이다' 22명(3.1%), ② '조금 빠를 것이다' 229명(32.2%), ③ '조금 늦을 것이다' 291명(40.9%), ④ '아주 늦을 것이다' 125명(17.6%), ⑤ '불가능 할 것이다' 44명(6.2%)으로 나타났다. 즉, 남북통일이 빠를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늦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남북통일의 실현 전망

	Frequency	Percent	Cumulative Percent
아주 빠를 것이다	22	3.1	3.1
조금 빠를 것이다	229	32.2	35.3
조금 늦을 것이다	291	40.9	76.2
아주 늦을 것이다	125	17.6	93.8
불가능 할 것이다	44	6.2	100.0
Total	711	100.0	

(9)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협력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는 ① '한미 간 협력' 119명(16.7%), ② '북미 간 협력' 59명(8.3%), ③ '한중 간 협력' 46명(6.5%), ④ '한일 간 협력' 7명(1.0%), ⑤ '한미일 간 협력' 37명(5.2%), ⑥ '한미북 간 협력' 438명(61.6%)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관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협력관계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한미간 협력	119	16.7	16.9	16.9
북미간 협력	59	8.3	8.4	25.2
한중간 협력	46	6.5	6.5	31.7
한일간 협력	7	1.0	1.0	32.7
한미일간 협력	37	5.2	5.2	38.0
한미북간 협력	438	61.6	62.0	100.0
결측값	5	.7	100.0	
Total	711	100.0		

(10) 정부의 최우선적 대북정책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1순위로 선택한 것은 ① ‘북한의 비핵화 조치’ 263명(36.8%), ② ‘평화협정 체결’ 166명(23.3%), ③ ‘남북 간 경제협력’ 90명(12.7%), ④ ‘북한의 개혁·개방’ 128명(18.0%), ⑤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43명(6.0%)으로 나타났다.

<표 13> 정부의 최우선적 대북정책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북한의 비핵화 조치	262	36.8	37.0	37.0
평화협정 체결	166	23.3	23.4	60.4
남북 간 경제 협력	90	12.7	12.7	73.1
북한의 개혁·개방	128	18.0	18.1	91.1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43	6.0	6.1	97.2
기타	20	2.8	2.8	100.0
결측값	2	.3	100.0	
Total	711	100.0		

이 결과는 <표 14>의 최우선적 대북정책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정부의 최우선적 대북정책 다중응답분석 결과

Case Summary

	Cases					
	Valid		Missing		Total	
	N	Percent	N	Percent	N	Percent
\$최우선대북정책 ^a	683	96.1%	28	3.9%	711	100.0%

a. Group

\$최우선대북정책 Frequencies

	Responses	Percent of Cases		
		N	Percent	
best policy ^a	북한의 비핵화 조치	507	24.7%	74.2%
	평화협정 체결	449	21.9%	65.7%
	남북 간 경제협력	304	14.8%	44.5%
	북한의 개혁 및 개방	331	16.2%	48.5%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187	9.1%	27.4%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152	7.4%	22.3%
	남북 간 문화 및 체육 교류	73	3.6%	10.7%
	남북 간 교육협력	46	2.2%	6.7%
Total		2049	100.0%	300.0%

a. Group

(11)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선두 주자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이 470명(66.1%)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북한’ 290명(40.8%), ‘미국’ 225명(3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통일의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며, 대한민국의 우방인 미국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들은 남북 통일과 관련하여 중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응답자들은 인식하였다.

<표 15>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1순위 빈도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한국	470	66.1	67.3	67.3
미국	50	7.0	7.2	74.5
북한	154	21.7	22.1	96.6
중국	3	.4	.4	97.0
일본	4	.6	.6	97.6
러시아	1	.1	.1	97.7
국제사회	8	1.1	1.1	98.9
시민단체	1	.1	.1	99.0
한국 국민 개개인	7	1.0	1.0	100.0
결측값	13	1.8	100.0	
Total	711	100.0		

다중응답 결과도 1순위 빈도와 유사하게 한국, 북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지 국제사회와 중국의 역할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다중응답분석 결과

	Cases					
	Valid		Missing		Total	
	N	Percent	N	Percent	N	Percent
§통일에앞장서는나라 ^a	693	97.5%	18	2.5%	711	100.0%

a. Group

§통일에앞장서는나라 Frequencies

		Responses		Percent of Cases
		N	Percent	
country ahead of reunification ^a	한국	616	29.6%	88.9%
	미국	359	17.3%	51.8%
	북한	616	29.6%	88.9%
	중국	122	5.9%	17.6%
	일본	17	.8%	2.5%
	러시아	11	.5%	1.6%
	국제사회	161	7.7%	23.2%
	기업	28	1.3%	4.0%
	시민단체	1	.0%	.1%
Total	한국 국민 개개인	148	7.1%	21.4%
Total		2079	100.0%	300.0%

a. Group

2. 자료의 관계분석

1) 나이와 통일 필요성 간의 분석

응답자들의 나이와 통일 필요성 사이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금 필요하다’ 231명(32.6%),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 150명(21.2%), ‘보통이다’ 150명(25.4%)으로, 응답자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나이와 통일 필요성 간의 교차분석

		통일필요성					Total
		반드시 통일돼야	조금 필요하다	보통이다	아직 시기상조다	절대적으로 불필요	
나이	20세이하	30	54	57	31	3	175
	21-30세	54	140	103	76	11	384
	31-40세	13	14	10	9	3	49
	41-50세	20	10	6	5	1	42
	51-60세	21	12	2	8	1	44
	61세이상	12	1	2	0	0	15
Total		150	231	180	129	19	709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93.152a	20	.000
Likelihood Ratio	85.146	20	.000
Linear-by-Linear Association	29.893	1	.000
N of Valid Cases	709		
a. 9 cells (30.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40.			

2) 응답자의 나이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 간의 분석

응답자들의 나이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 사이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에 대하여 ‘아주 안좋다’ 227명(32.2%), ‘조금 안좋다’ 186명(26.4%)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는 더욱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응답자의 나이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 간의 교차분석

		김정은 위원장 호감도					Total
		아주 좋다	조금 좋다	보통이다	조금안좋다	아주안좋다	
나이	20세이하	4	2	58	50	61	175
	21-30세	1	10	123	106	138	378
	31-40세	0	3	28	10	8	49
	41-50세	1	2	26	8	4	41
	51-60세	2	3	16	11	14	46
	61세이상	1	5	6	1	2	15
Total		9	25	257	186	227	704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90.758a	20	.000
Likelihood Ratio	68.676	20	.000
Linear-by-Linear Association	26.691	1	.000
N of Valid Cases	704		
a. 12 cells (40.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19.			

3) 응답자의 나이와 최우선 대북정책 간의 분석

응답자들의 나이와 정부의 최우선 대북정책 사이의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의 최우선 대북정책에 대하여 ‘북한의 비핵화 조치’ 445명(63.8%), ‘평화협정 체결’ 134명(18.8%)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의 나이에 관계없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응답자의 나이와 최우선 대북정책 간의 교차분석

		최우선대북정책1							Total
		북한의비 핵화조치	평화협정 체결	남북간경 제협력	북한의개 혁및개방	남북이산 가족상봉	북한주민 인권신장	문화 및 체육교류	
나이	20세이하	109	34	10	11	8	3	0	175
	21-30세	237	71	32	17	8	2	4	371
	31-40세	30	11	3	3	1	1	0	49
	41-50세	23	12	4	0	2	0	0	41
	51-60세	37	3	2	3	1	0	0	46
	61세이상	9	3	2	1	0	0	0	15
Total		445	134	53	35	20	6	4	697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25.722a	30	.689
Likelihood Ratio	30.707	30	.430
Linear-by-Linear Association	1.741	1	.187
N of Valid Cases	697		
a. 25 cells (59.5%)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09.			

IV. 결론 및 시사점

2018년의 남북관계는 3번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더구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관심사항이 되었다.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 2018년 4월, 5월, 9월 문재인-김정은 사이에서 모두 5차례가 열렸다. 그러나 1994년 7월 25일 김영삼-김일성의 정상회담은 불발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의 안전을 항구적으로 위협하지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유로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철폐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에 대한 생각, 김정은 정권의 호감도, 북한의 핵 미사일 포기 가능성, 통일의 필요성 및 가능성, 필요한 대북정책, 주변국과의 관계 정립, 인권문제 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북한과 접경을 하고 있는 강원도 소재의 대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사)통일문제연구원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SPSS V.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북한에 대한 생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가 응답자의 333명(46.8%)를 차지하여, 긴박한 남북관계를 응답자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하여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41.1%)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47.4%)가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8.1%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다중응답분석의 결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263명(36.8%), 그 다음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은 ‘평화협정 체결’ 287명(4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번째로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이 155명(2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과제를 알 수 있다.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선두 주자에 대하여 당사국인 한국과 북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은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중요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나이와 통일 필요성 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금 필요하다’ 231명(32.6%),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 150명(21.2%), ‘보통이다’ 150명(25.4%)으로, 나이에 관계없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설문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응답자들은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공동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지만, 많은 응답자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미평화협정 및 남북기본협정의 체결에 뒤따르는 후속과제는 군비통제이다. 남북간 평화상태가 도래할 경우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군비통제는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동북아 및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 대국화’와 일본의 ‘보통 국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영토분쟁에 따라 동남아의 각 나라들도 군비를 증강하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군비통제의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은 대북 억제우위 뿐만 아니라 미래 전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안보적 대비가 되어야 한다. 군비통제과정에서 적정 안보능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군축 및 국방선진화가 중요한 이유이다(조한범, 2018, p.8).

따라서 북한과 협력하고, 통일을 위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과제이므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대비도 결코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성화. (2017). "Promoting Inter-Korean Peace through Twining Propaganda Villages in Korean DMZ."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기웅. (2012). "김대중, 노무현 및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민. (2018). "김정은 3회 연속 중국방문과 북중관계의 변화." 국방대학교 국방안전보장문제연구소 『안보현안분석』, Vol.145.
- 김종철. (2009). "남북관계 경색."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민국 정부. (2018). "2018 남북정상회담(평양) 참고자료." 2018.09.16.
- 도희윤. (2018). "납북자 송환과 정상회담." 평양남북정상회담 납북자 송환촉구를 위한 긴급정책토론회 『2018 긴급 정책토론회』, 17-21.
- 문화체육관광부. (2018). "국민 10명 중 6명 '통일 이익 커'…北에는 상반된 인식," 『이데일리』, (7월 31일).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대전환기 한반도, 국민의 생각은?" 『2018 통일의식조사 발표 자료』 2018.10.2.
- 윤성학. (2018). "이슈 앤 포코스 - 북러정상회담과 북러관계 전망." 민족화해협력범 국민협의회, 『민족화해』, 95호.
- 이석범. (2016).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국진.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요인분석 : 리더십 변수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한범. (2018).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제언." 국방대학교 국방안전보장문제연구소, 『안보현안분석』, Vol.145.
- 통일부. (1992).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 日高義樹. (2017). 『米朝密約』. 徳間書店.
- 버시바우 前주한 美대사. 「조선일보」. (2018). "대북제재 완화 요청, 文대통령의 실수라고 생각." (11월 20일), A6.
- 「조선일보」. (2018). "美 인권단체의 분노," (10월 3일), A5.
- (2018). "北인권재단 폐쇄, 이 정부의 인권의식에 참담하다." (7월 9일), A4.
- (2018). "한변 등 북한 인권단체 5곳, 오늘부터 김정은 '릴레이 고발'." (11월 6일), A12.
- (2018). "대북제재 완화 요청, 文대통령의 실수라고 생각." (11월 20일), A6.
- 김무성. (2018). "유럽 정상, 美 관료에 "문 대통령은 이상한 사람." 「조선일보」, (11월 20일).
<http://news.chosun.com/site/2018/11/20/2018112003722.html> (검색일: 2018. 11. 25).
- 「뉴시스」. (2018). "목발탈북자 지성호, '문대통령, 北 인권문제 제기해야'." (9월 18일).

news.v.daum.net (검색일: 2018. 10. 21).

「데일리안」. (2018). “인권예 가로막힌 북일관계…가깝고도 먼 그대여.” (10월 26일).

<http://www.dailian.co.kr/news/view/747682/ZM1> (검색일: 2018. 10. 28).

「KBS」. (2018). “2018 통일의식 조사…北 호감 급상승, 통일 필요성 인식 줄어.” (8월 15일).

<http://news.zum.com/articles/46993691> (검색일: 2018. 10. 21).